시 론

일본은 1980년 5·18에서 '무죄'인가

나 의 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이음새가 좋았다. 곰팡이도 피지 않았고, 고장도 나지 않았다. 일본과 전두환이 그랬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維新)이 죽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잽싸게 합동수사본부장 자리를 허리에 찼고, 이후 둘은 밀월을 즐긴다. 그 음습한 행각을 맨 먼저 파헤친 건 일본 땅에서였다. 5·18이 가고 두 달이 채 안 된 1980년 7월20일, '한국 1980년 5월, 광주민중의 결기'란 이름의 책자(A4 용지 크기, 94쪽)가 출간된다. 일본의 국제연대계간정보지인 '세계에서' 편집위원회와 日韓조사운동 단체가 공동 편집한 것으로, '광주사태에서 일본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란 제목을 달고 그 '어디'를 추적한다. 이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최근 일본에서 어렵사리 수집한 것임을 밝혀둔다.

'광주사태에서 일본은…'이란 글은 고작 1쪽짜리지만, 일본의 놀놀한 속내가 들여다보여 온몸에 전율이 온다. 아니, 이럴 수가! 불의(不義)한 전두환이랑 짝꿍이 되다니….

글은 들머리에서 셋으로 압축한다. "하나-(1980년) 5월20일, 5·17쿠데타가 일어나자 전 아프가니스탄 대사 마에다(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제대를 졸업한 한국통)를 특명대사로 파견했다. 광주결기와 피의 탄압 때 방한하도록 하고 전두환그룹(신군부)과 협의했다는 것. 둘-마에다 특사를 6월5일 귀국시키고 대신에 6월9일 기우치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서울로 보냈다. 광주진압 후 전두환그룹과 협의했다는 것. 셋-목포에 있는 일본 기업에서 데모대들이 탈취한 버스에 대해 곧 전두환그룹에 정식으로 '조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부산영사관 직원 3명을 일본인 보호를 위해 현지에 파견했다."

그 세 가지 공식 행동에 대해 익명의 글쓴이는 아주 짧은 의견을 내놓는다. "이것뿐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에다 특사 파견 자체가 '전두환쿠데타'를 승인하는 외교행동이었다." 비밀금고 같은 데에 가둬 두고픈 일본 외교를 세상에 끄집어내 단칼로 우세시킨 '익명'은 지금 살아 있을까? 이어 그는 "'불쾌한 기분'을 나타내는 대신에 특사를 파견, 전두환그룹과 접촉하고, 광주를 피로 제압한 다음날(5월28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전두환과 정식회담을 가졌다"고 껑껑 짖어댄다.

5·18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광주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명확한 지지의 의사 표현을 전두환은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단언한다. 셋 중 하나만 보자. 일본 정부가 1980년 5월27일(5·18 광주 최후의 날) 내놓은 공식 성명은 탁월한 외교적 어법을 동원하고 있다. "광주시 중심부에 있는 전남도 청사를 비롯해 여러 곳에 무장한 과격파를 모두 제거하고 정부 관할 하에 두었다는 것을 중시하고 광주의 질서회복이란 제일 관문은 돌파했다"며 은근슬쩍 전두환의 손을 잡는다. 속엣말로 하면, 전두환 당신, 광주사태 잘 처리한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쯤 되는 것인가.

세월이 무심했나, 사람이 무심했나? 하여튼 간에 그 광주로부터 세월은 흘러 2000년 어느 봄날, 박선원이란 청년의 논문이 한 전국종합일간지에 소개된다. 신문은 기사의 리드(Lead, 보도기사에서 그 내용의 핵심을 담은 첫머리의 짧은 구절)에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며 독자의 눈을 자극한다. 나는 이 논문이 이 땅에서 생산된 '일본-전두환 커넥션'의 첫 기록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사태에서 일본은…'보다 훨씬 많은 팩트를 담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시간적 범위도 10·26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올라탄 이후까지로 확장했다. 스노베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녹취, 신뢰도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기도 하다.

박선원은 당시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였고, 영국 워릭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안보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 1979-1980년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나타난 일본의 영향력'을 썼는데, 이 논문 3장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개입' 부분을 다루면서 그 '검은 커넥션'을 집어 올린다.

무엇이 둘을 단짝이게 했을까? 한국의 정치가 '박정희식(式)' 강압정치라 해도 안정만 유지되면 자국에 이로울 거라는 생각과 이웃의 지지 없는 '나라 따먹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 둘 사이의 '필요'가 '어깨보증'에 이르게 했을 거라고 박선원은 분석한다. 짝 만들기 중신아비는 허문도, 그 사람이었다. 당시 주일한국대사관 수석 공보관인 그는 한국 땅 육군본부에서 주한일본대사 스노베를 만나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가 열린다"고 했다. 스노베는 뽀르르 본국에 보고했고, 그로부터 짝꿍십(ship)이 커나갔다. 12·12 때도 허문도가 스노베한테 쿠데타를 사전 통보하고 협력을 구했다.

일본은 5·18 직전까지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 '북한남침설'을 전두환그룹 쪽에 흘렸다. '5월10일 것' 또한 가짜인 줄 알면서도 전두환은 5·17쿠데타를 추진하는 데 요긴하게 써먹었다. '북한이 한국사태를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5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남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는 5월12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 정국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튿날 위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특수부대(공수부대) 이동의 정당성과 계엄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어 터진 게 뭔가? 5·17쿠데타, 그리고 그에 저항한 5·18이다.

작금, '경제왜란'이란 말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39년 전의 일본을 떠올리면서, 이 땅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한다.

자치칼럼

주민자치! 외부기준서 벗어나 자발성에 기초해야

김 용 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 지방자치학회장

주민자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말 그대로 하면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있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주민과 지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하는지, 지방이 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도와 경험은 30여년 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그동안의 지방자치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지방에서 주민으로 자치를 이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민이 스스로 다스림의 주인이며 주체인 주민자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외부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청이나 구청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혁신평가니 합동평가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다. 마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동 단위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다. 필자도 평가위원으로 평가지표개발이나 평가를 다녀보지만 우리 나라는 평가가 너무 많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는 순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외부에 전문가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주민자치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이념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나 사회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준이나 평가는 항상 보편성이나 객관성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평가기준에 적합한 주민자치를 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고유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민의 고유한 힘, 주민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성에서 나온 힘으로 세워진 자치이어야 진정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하나의 평가기준,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다양한 가치 하나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민자치가 많은 사회, 이를 인정해 주는 사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고유한 자발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자발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이다.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우리의 몸과 생각에는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경쟁은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다투는 일이다. 치열한 경쟁일수록 정해진 틀이 더욱 고착화된다. 주민과 주민이 경쟁해서는 안된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처음에는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더딜 수 있다. 그러나 자주 만나면 서로 알게 되며, 소통이 되고, 논의가 된다. 과정에서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의 효과성은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주입돼 있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관점을 의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이런 것이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민자치의 얼굴은 천만가지이다. 즉 익숙한 것으로 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주민자치의 현장은 마을이다. 우리는 마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곁으로 마을에 이름을 명명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척한다. 마을을 알아야 마을의 의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걸어야 한다. 마을을 걸으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담벼락에 수줍게 피어 있는 나팔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길 모퉁이에 쓰레기 더미도 볼 수 있다.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의 가벼운 걸음도 볼 수 있고 그 옆을 위협하듯 지나가는 자동차도 확인할 수 있다. 걸으면서 주위의 모든 보이는 것을 보여지는 데로 그대로 관찰해야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익숙한 마을을 발견하는 것 보다 낯설은 마을을 발견할 때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다. 행정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와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주민을 믿는다.

독자투고

여름철 차량화재 각별한 주의 필요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량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에는 외부 기온도 오르지만, 차량 내부는 밀폐되어 있어 90℃이상까지 온도가 상승, 점화원만 있으면 급격한 연소와 함께 인근의 가연물로 연소가 확대된다. 또한 여름철에는 장시간 운행으로 차량의 결함이나 타이어 마모 정도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전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BMW차량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차량화재는 3천여건으로 50%는 승용·승합차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영암 관내 지역에서도 최근 운행중인 통근버스와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운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차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량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 자체결함, 무더위에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 가동,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과열, 차량 노후화에 따른 배선·브레이크 계통 불량, 장기간 주차된 차량의 밧데리 주변 가연물 유입등 다양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각종 오일과 냉각수·타이어·엔진룸·차량 배선·배터리 상태점검과 내부 가연물 유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강한 햇빛 아래에 주차시에는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 두고, 장시간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세심한 점검과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차량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여름철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전·후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홍태·영암소방서 구조대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광주 북구 '인사잡음' 공직자 사기에 악영향

광주 북구가 최근 실시한 5급 이상 승진 및 전보 등 올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구의회와 노조를 중심으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민주적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 들어 문인 구청장의 측근인사 2명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며, 지방선거 기간 중 구청장 부인을 수행한 인물이 현재 북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인사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공노 북구지부는 "5급 승진자들이 동주민센터로 전보되거나 구청 등으로 상향 전보되는 기존 원칙과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로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회 복지직은 근무평정 순위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직렬 승진 대상자들도 지난달 발표된 근무평정 순위의 급격한 변화로 속앓이를 감내해야만 했다"며 "널뛰기 인사평가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선 시대를 맞아 단체장 주변인물들이 공직이나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선거를 도운 인사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이른 바 '보은인사'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공직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생각해 단체장이 자기사람을 심는 것을 '엽관제'라고 한다. 오래전 서구 유럽에서 행해졌던 전근대의 인사제도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엽관제'가 만연하고 있다.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선거공신에게 진부채를 갚고 자기의 복심대로 행동할 인물이 필요하겠지만 자칫 과도하면 말썽이 일 수밖에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인사는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하고 이는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단체장은 인사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5G 기지국 지방 홀대 스마트시티 차질 우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5세대 이동통신은 최고 전송 속도가 초당 1기가비트(Gbps) 수준으로 초고화질 영상이나 3D 입체영상, 360도 동영상, 홀로그램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필수적이다.

5세대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이 짧아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자동차가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을 피하도록 하는 제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경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아무런 지연 없이 장비나 로봇 등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이 지방에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연계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갑)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장치 중 약 60%(8만8천746개)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광주는 4%, 전남은 2%에 머무는 등 대부분의 지방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전체 장치의 약 94%를 서울·수도권에 집중 설치해 지역 홀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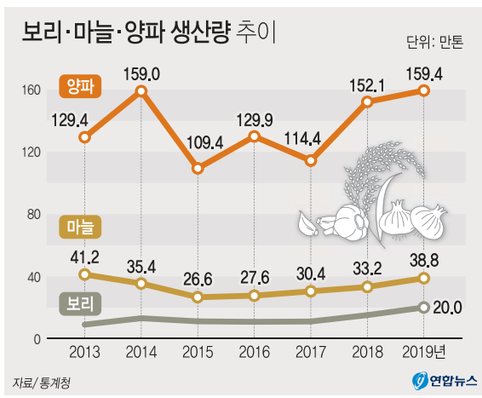
5G 기지국 설치의 지역 편차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지하철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노선에 52국의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는 단 1국도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가입자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수도권 고객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통신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5G 망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반갑지 않은 풍년'…올해 양파 생산량 159만t 역대 최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역대급' 풍작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4.8% 증가한 159만4천450t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생산량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재배 면적은 2만1천777ha(1ha=1만㎡)로 작년보다 17.6% 감소했다.

정구현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은 "작년 양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월동기 적정 기온으로 생육이 좋았다"며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도 적절한 강수량과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생육이 원활했고, 병해충 발생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마늘도 풍년이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작년보다 16.9% 증가한 38만7천671t이었다. 2013년(41만2천250t)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7천689ha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마늘 역시 작년 가격 하락에 따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지만, 양파와 같이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양파와 마늘은 공급과잉으로 시장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따라 관가와 기업 등에서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는 한편, 농가는 수출로 판로를 확대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 보리 역시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32.1% 증가한 20만3t이었다. 재배면적은 4만3천720ha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보리는 재배 면적이 감소했지만, 생육 기간 기온이 적정했으며 이삭이 여무는 시기인 올해 5-6월에 일조시간이 풍부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